석유화학, 울산파업 물류대책 “비상”

현대자동차 이어 화물연대 12월1일 파업 ... 자체 수송대책 마련키로

현대자동차 노조가 한-미 FTA 저지 등 4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정치파업 방침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도 12월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울산지역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는 11월15일 4시간 부분파업, 22일 4시간 부분파업, 24일 2시간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11월 들어 3차례에 걸쳐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참여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27일 및 28일에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주관의 한-미 FTA 저지 촛불문화제에 간부 중심으로 동참하고 차후 투쟁일정을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한 만큼 이후에도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1-2차례 더 파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도 12월1일부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는 탱크로리, 대형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자동차 수송용 캐리어 등 조합원 자동차 1500여대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울산지역의 산업물량 수송에 일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전국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에 소속된 울산지역 덤프차량 200여대 중 일부도 중앙의 방침에 따라 11월 12일부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역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가 정치파업에 잇따라 동참하고 있고 산업물량 수송을 담당할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트레일러, 캐리어 등도 파업에 참여키로 하면서 울산지역의 경제계는 파업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SK나 S-Oil 등 울산 석유화학공단 입주기업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수송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파업 장기화에도 대비해 파업 향방을 예의주시하면서 파업사태가 조기에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7>